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백승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백승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4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의 원 : 백승규 · 서명일 · 이우완 · 문순규 · 곽은정  
권순재 · 지상록 · 진형익 · 류성국 · 변보미  
박현재 · 감규상 · 박해정 의원(13명)

## 1. 제안 이유

-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후 2025년 11월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됨. 이에 경상남도는 2026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창원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심 도시로 16개의 지정 방산업체와 2,500여 개의 방산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고 핵심 연구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음. 또한 한국 방산 매출의 절반이 창원에서 창출되며 국내 무기류 수출의 약 85%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기에 적합한 도시임

## 2. 주요 내용

- 방위산업은 개발 기간이 길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므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종 지원을 보장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방위사업청 주도로 진행 중인 5조 5천억 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함

- 방위산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2040년까지 차세대 항공엔진 독자 개발 목표 완수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함

### 3. 건 의 문: 붙임

-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근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산업의 기술력은 미래 경제와 국가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2025년 11월 방산 분야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며 국방 기술 자립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2026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총 3단계의 심의 과정에서 아직 첫 단계인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으로 응모하여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나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이 지연될 이유가 크게 없다.

창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이다. 16개의 지정 방산업체와 2,500여 개의 방산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국방기술품 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등 핵심 연구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다. 한국 방산 매출의 절반이 창원에서 창출되며 국내 무기류 수출의 약 85%를 책임지고 있는 K-방산의 전초기지다.

특히 현재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5조 5천억 원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창원에 소

제한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초고온 소재 및 정밀 가공 역량을 갖춘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민관 협동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의 핵심인 첨단항공엔진 기술은 독자적 무기 수출과 유지 비용 절감,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 전략 자산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액공제,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국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례로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단지별 1,000억 원 인프라 지원 한도 및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 파격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562조 원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K-방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만 특화단지 지정에서 소외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개발 기간이 길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특화단지 지정이 계속 지연되면 기업들은 조 단위의 투자와 시설 확충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K-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방위산업은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클럽 비즈니스의 형태를 띤다. 특히 항공엔진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조차 무려 55조 원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자금력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2040년 차세대 항공엔진 독자 개발이라는 목표를 완수하려면 정부의 신속한 결단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창원국가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를 육성하여 창원이 글로벌 방산 메카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일

창 원 시 의 회